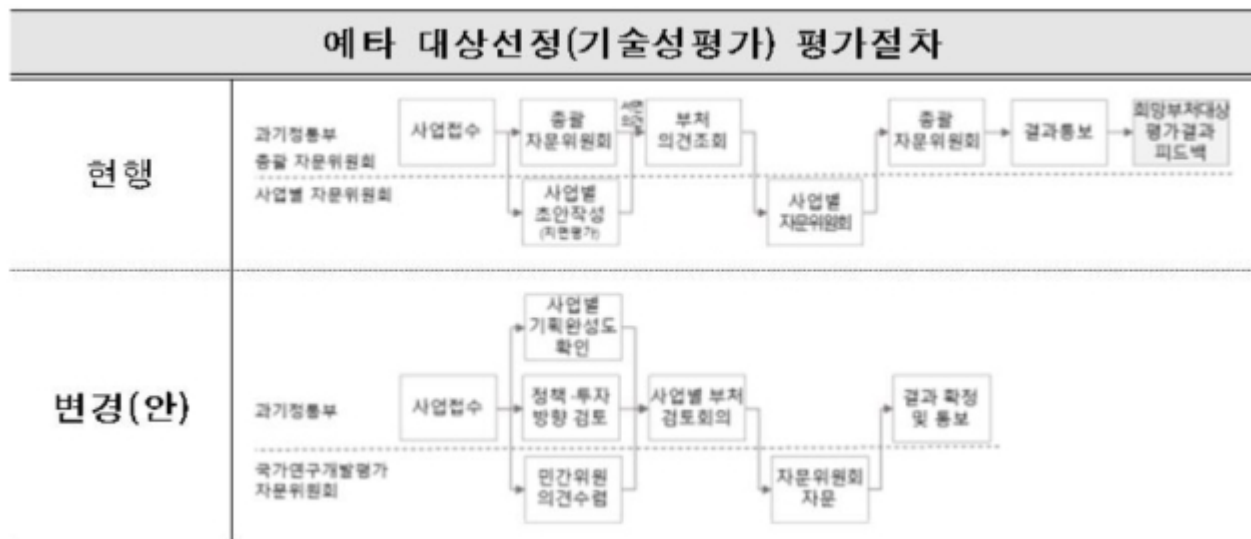


"중복심사 줄이고 심층분석 확대"...과기정통부, 예타 제도 개선

기사입력 2020-04-26 12:00

28~29일 관련 온라인 교육 진행

5월6일 제2차 예타 대상선정 절차 안내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해 본예타와의 차별성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갈무리) 2020.04.26/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해 본 예타와의 차별성을 확립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었으나, 사업부처 입장에서 일부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존재했다.

또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 중 과학기술의 정책적 측면과 연구개발 투자 관점을 고려한 사업의 선별이 요구됐다. 아울러 다수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여러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처의 평가부담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른 이번 제도개선은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의 역할분담 및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반영 등이 골자다.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 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각각 수행하게 된다.

또 다수 위원회로 운영되던 평가체계는 본예타를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로 회의기구를 통합해 대상선정, 본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전 과정을 논의한다.

아울러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위해, 제출된 사업의 주요 국가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과 예산 관점에서의 재원 투입 필요성을 검토해 예타 대상선정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부처의 사업 추진의지를 고려하기 위해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한 제도개선은 정책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문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기술성평가 총괄자문위원회 논의, 관계기관 의견 수렴,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등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실시되는 연구개발 예타를 설명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오후 2~5시) 관련 온라인 교육이 진행된다. 또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선정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5월6일 오후 3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cho11757@news1.kr

-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421&aid=0004606990>
